

현안과제연구

2010. 10. 4

## 충남의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연구수행: 김정연 · 성태규 · 한상욱 · 오용준

# 충남의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김정연·성태규·오용준·한상욱

## - 목 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II. 충남의 균형발전 여건분석 .....	3
III. 상생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설정 .....	28
IV. 권역별 기능특화 및 균형발전 전략 .....	34
V.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	38
VI. 권역별 발전촉진을 위한 핵심사업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	49

# I.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압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국가적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몇몇 특정 부문과 지역에 편중하여 자본투자를 집중시킨 개발전략은 극심한 사회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 발전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 양상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 격차, 수도권+경부축의 발전지역과 나머지의 쇠퇴지역으로의 양권화(兩圈化),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즉, 성장하는 대도시와 정체하고 있는 중소도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간의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경·강현수, 2005, 5).
- 지방에서도 국가 차원의 불균형화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서북부지역과 경부축상에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절대적 쇠퇴가 진행되면서 시·군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도 도시·산업화가 진행되는 지역, 일반적인 농어촌, 과소농어촌 등으로 지역특성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 한편, 세종시, 도청신도시, 태안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고속교통체계의 구축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은 충남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正) 또는 부(負)의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충청남도내 지역간 불균형 실태 파악과 변화전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특히, 시·군간, 권역간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여 고루 잘 사는 충남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충남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 공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충남의 불균형 여건 분석
  -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설정
  - 권역별 기능 특화 및 균형발전 전략
  -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 권역별 발전 촉진을 위한 전략사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 Ⅱ. 충남의 균형발전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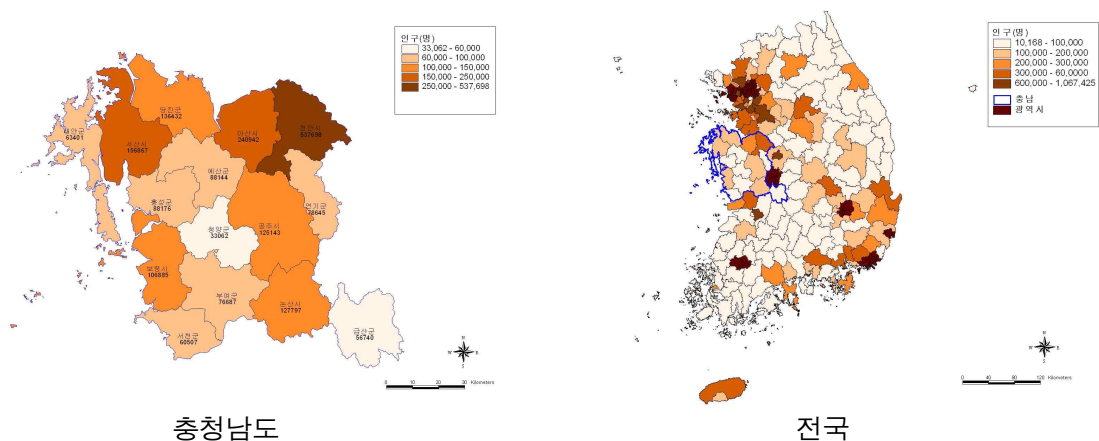
### 1) 충남의 지역 불균형 현상과 문제점

#### (1) 인구규모와 구조

- 충남의 인구는 2003년 1,912천명에서 2008년 2,018천명으로 105,734명(연평균 1.08%)이 증가하였다.
-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인구는 연평균 3.15%씩 증가하면서 충남 전체 인구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광역시(공주, 계룡, 연기)은 연평균 0.03%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도청신도시권(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논산, 부여, 금산), 서해안권(보령, 태안, 서천)은 각각 -1.57%, -1.50%, -0.92%씩 감소하고 있다.

<표 1> 충남의 권역별 인구규모와 변화추이

구 분	전국시·군 (특별시 광역시 제외)	충 남						
		합계	북부권	내륙권			서해안권	금강권
				소계	대전광역시 도시권	도청 신도시권		
2003	26,008,972	1,912,803	917,918	471,327	244,748	226,679	241,724	281,734
2008	27,102,149	2,018,537	1,071,939	454,581	245,199	209,382	230,793	261,224
증감수 (‘03-’08)	1,093,177	105,734	154,021	-16,746	451	-17,297	-10,931	-20,510
연평균 증감률 (‘03-’08)	0.83	1.08	3.15	-0.72	0.03	-1.57	-0.92	-1.50



[그림 1] 전국 및 충남의 인구규모 분포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지역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 지칭하는데, 북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 특히 금강권과 서해안권은 고령화율이 각각 21.64%, 20.88%로 매우 높다.
- 조출생률은 인구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組出生率)로 나타낸다. 북부권은 11.47로 전국 시·군 평균인 8.61의 1.3배에 이르고 있고 내륙권도 9.54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서해안권과 금강권은 각각 6.96, 7.26으로 매우 낮다.
- 이와 같이 서해안권과 금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조출생률은 심각한 농촌의 인구 문제 즉,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른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한다.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 공공 서비스 및 상업적 생활 서비스 공급 축소 등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거나 유입을 가로막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지역 저발전의 집약적 표현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김정섭, 20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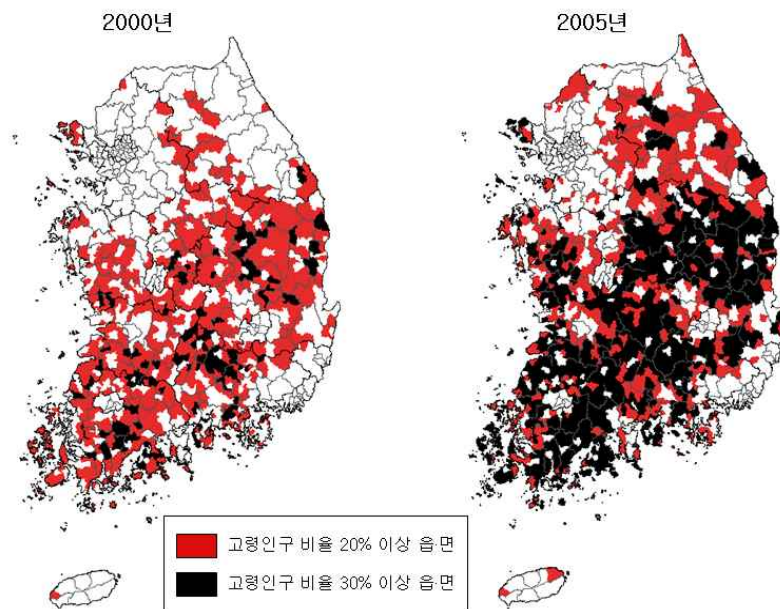
<표 2> 충남의 권역별 고령화율과 조출생률

지표	세부내용	전국 시·군	충남								
			합계	북부권			내륙권			서해 안권	금강 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고령 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7.30	17.12	12.02	9.13	14.92	18.06	13.42	22.70	20.88	21.64
조출 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 비율(組出生率)	8.61	8.87	11.47	12.62	10.33	8.03	9.25	6.82	6.96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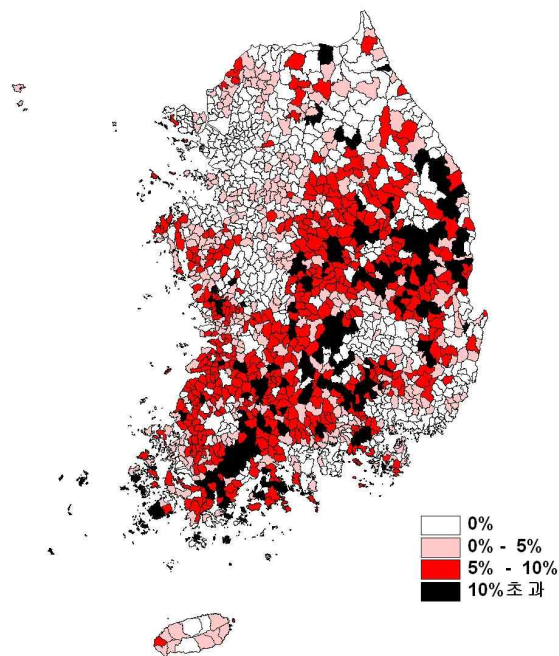
- 이것은 마을의 과소화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2005년 기준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에 따라 전국의 읍·면을 구분하면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읍·면의 과소화 마을 비율은 해당 지역의 고령화율 및 조건불리지역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 즉,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송미령 외, 2009, 438).

- 충남에서는 서해안권, 도청신도시권, 그리고 금강권 일부에서 과소화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고령화율로 본 전국의 읍·면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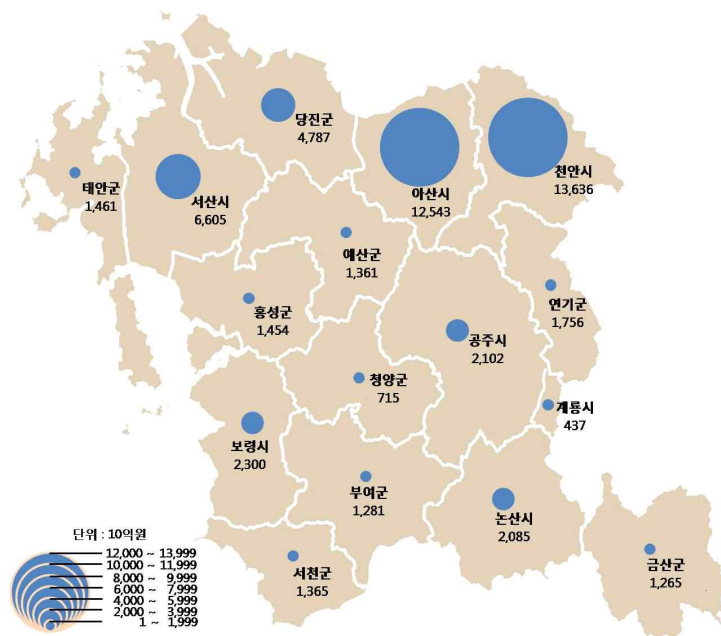


자료: 송미령 외, 2009, p.438.

[그림 3] 읍면별 인구과소화마을의 비율 분포

## (2) 산업 및 지역경제

-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도내 시·군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2008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61조 5,686억원(불변가격)으로 전국의 6.2% (전국 6위)를 점유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제조업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9.0%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다(전국은 4.6% 성장).
- 이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급속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이 GRDP(2007년)의 68.1%를 차지하고, 그 외 12개 시·군이 3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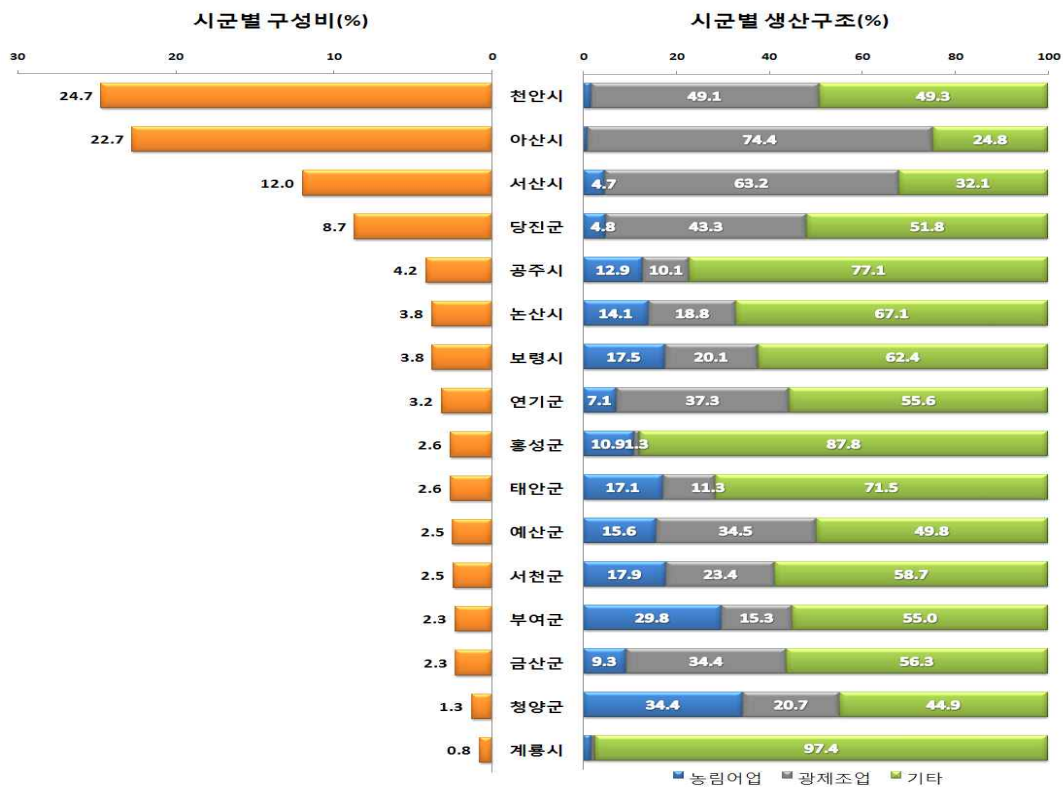
- 산업구조(생산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아산, 서산, 천안, 당진 등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각 산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차산업이 12.6%('00)에서 7.4%('08)로, 2차산업이 34.0%('00)에서 49.8%('08)로, 3차산업이 53.4%('00)에서



42.8%('08)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2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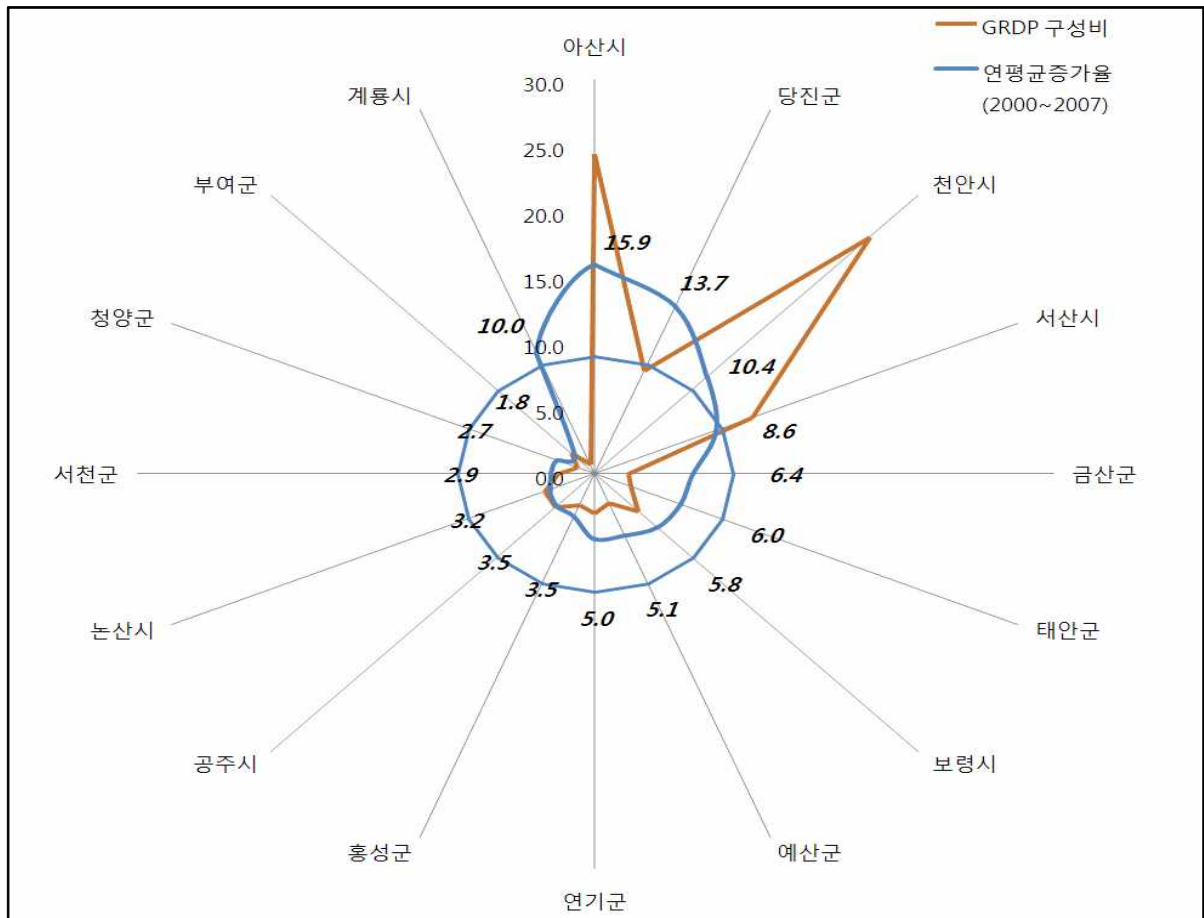
- 2007년말 충남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각 130,104개, 622,489명이며, 지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각각 50.4%, 59.4%이고, 특히 광공업체 종사자수가 73.3%에 달하고 있다. 북부권 내에서도 광업체 사업체수가 천안이 27.4%, 아산이 11.9%이고, 종사자수는 천안이 34.5%, 아산이 26.6%로 다수를 차지한다(부표 참조).

<표 3> 시·군별 GRDP 구성비 및 산업구조(생산구조)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북부권 4개 시·군이 충남 GRDP의 68.1%를 점유하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충남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 2007년 GRDP 구성비 : 천안(24.7%), 아산(22.7%), 서산(12.0%), 당진(8.7%)로 북부권이 충남 전체의 68.1% 점유
- 2000년~2007년 연평균 성장률 : 충남 전체(9.3%)<sup>1)</sup>, 아산(15.9%), 당진(13.7%), 천안(10.4%), 서산(8.6%) 순

1) 시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2007년까지의 자료사용, 2008년까지의 성장률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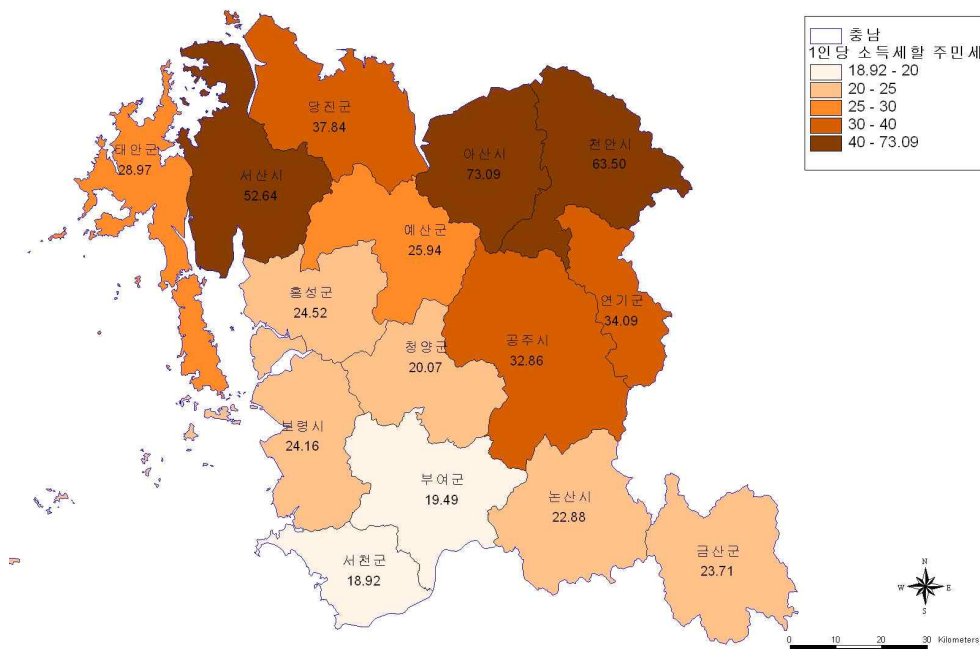
[그림 5] 시군별 GRDP 구성비(2007년)와 연평균 성장률(2000~2007년)

#### ○ 소득수준과 지자체 재정기반

- 지역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는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충남지역 내에서는 북부권의 아산이 73.09, 천안이 63.50, 서산이 52.64, 당진이 37.84로 가장 높고, 대전근교권의 연기가 34.09, 공주가 32.86이며, 금강권의 부여가 19.49, 서천이 18.92로 가장 낮다.
-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권의 천안과 아산이 각각 54, 당진이 37, 서산이 32로 가장 높고, 서해안권의 홍성이 23, 보령과 태안이 22로 높은 편이며, 부여와 서천이 각각 14, 12로 가장 낮다.

<표 4> 시·군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와 재정자립도

분	지표	세부내용	전국 평균	충남								
				총합	북부권			남부권			지방 자치 단체 평균	국 가 평균
					소계	북부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소득 수준	소득 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0.52	37.01	56.77	68.30	45.24	31.22	38.98	23.51	24.02	22.03
재정 자립 지정	재정 기반	재정자립도	25.94	27.22	44.27	53.94	34.60	19.55	20.41	18.72	18.60	17.03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 기업 및 외자유치

- 충남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외자유치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였다.
- 2004~2008년 기간 중 도내 유치기업 총 3,219개소 중 60.7%인 1,953개소가 북부권에 입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1,266개소(39.3%)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동 기간 중 유치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158,963명으로서, 이중 70.4%인

111,872명이 북부권에 고용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47,091명(29.6%)이었다.

- 2004~2008년 기간 중 도내 유치기업의 평균 고용규모(업체당 고용자수)는 49.4명이었다. 북부권에 유치된 기업의 고용규모는 57.4명으로 충남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29.6명으로 충남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표 5> 기업유치 5개년 실적('04~'08)

구 분		사업체수(A)		고용자수(B)		고용규모 (B/A)	
		개소	구성비	명	구성비		
합 계		3,219	100.0	158,963	100.0	49.4	
북부권		소계	1,953	60.7	111,872	70.4	57.3
		천안	647	20.1	39,565	24.9	61.2
		아산	487	15.1	30,340	19.1	62.3
		서산	159	4.9	14,062	8.8	88.4
		당진	660	20.5	27,905	17.6	42.3
내륙권	대전광역시 도시권	소계	275	8.5	5,717	3.6	20.8
		공주	133	4.1	2,358	1.5	17.7
		계룡	42	1.3	1,127	0.7	26.8
		연기	100	3.1	2,232	1.4	22.3
	도청신 도시권	소계	323	10.0	9,678	6.1	30.0
		홍성	93	2.9	2,859	1.8	30.7
		예산	197	6.1	6,090	3.8	30.9
		청양	33	1.0	729	0.5	22.1
서해안권		소계	229	7.1	24,703	15.5	107.8
		보령	139	4.3	6,638	4.2	47.8
		서천	62	1.9	1,424	0.9	23.0
		태안	28	0.9	16,641	10.5	594.3
금강권		소계	439	13.6	6,993	4.4	15.9
		논산	229	7.1	3,378	2.1	14.8
		금산	161	5.0	2,332	1.5	14.5
		부여	49	1.5	1,283	0.8	26.2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됨.

- 2006.7~2010년 기간 중 외자유치 MOU 체결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9건, 5,375백만 \$이며, 이중 실제 투자는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25건, 2,779백만\$이다.

<표 6> 외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

구분	합계		2006.7~12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MOU금액(A)	39	5,375	7	1,371	5	299	9	1,921	13	1,591	5	193
신고금액(B)	28	2,743	6	1,103	5	273	6	1,066	9	271	2	30
도착금액(C)	25	2,779	6	1,112	5	273	5	1,154	9	240	-	-
C/A*100	(64.1)	(51.7)	(85.7)	(81.1)	(100.0)	(91.3)	(55.5)	(60.1)	(69.2)	(15.1)	0	0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 동 기간 중 전자정보, 자동차,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 전략산업 관련 외자유치 실적은 전체 39건 중 35.9%인 14건이다.

<표 7> 업종별 유치건수 현황

합계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석유 화학	기계 장비	서비스	비금속 광물	식품	의약품	기타
39	4	6	4	2	2	3	1	2	1	14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 다만, 외국인 투자가 주로 천안,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국내 및 외투기업의 대부분은 경영 및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수도권에 근접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주로 도내 북부권을 선호하고, 나머지 지역은 입지여건상 기업들의 투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 이는 북부권과 나머지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수요대응형 산업입지기반 확충

- 2010년 현재, 충남도내에는 국가산단 5개소, 일반산단 42개소, 농공단지 88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137개소의 산업단지가 분포한다.
- 북부권에는 입지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및 일반산단이 주로 분포한다.
  - 국가산단 5개소 중 60%에 해당하는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일반산단 23개소(54.8%), 그리고 농공단지는 24개소(27.3%)가 입지하고 있다.

- 특히, 북부권에는 농공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비중이 높다.
  - 북부권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는 국가산단 2개소(40.0%), 일반산단 19개소(45.2%), 농공단지 64개소(72.7%)가 입지한다.
- 이러한 계획입지는 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부권 지역의 생산기반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간 기업유치 및 생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표 8> 산업단지 분포현황**

구 분		국 가		일 반		농 공	
		개 소	구 상 비	개 소	구 상 비	개 소	구 상 비
합 계		5	100.0	42	100.0	88	100.0
북부권	소계	3	60.0	23	54.8	24	27.3
	천안			9	21.4	4	4.5
	아산			5	11.9	9	10.2
	서산	1	20.0	6	14.3	4	4.5
	당진	2	40.0	3	7.1	7	8.0
내륙권	소계			13	30.9	44	38.7
	대전광역시권			9	21.4	13	14.8
	공주			3	7.1	10	11.4
	계룡			1	2.4		
	연기			5	11.9	3	3.4
	도청신도시권			4	9.5	21	23.9
	청양					5	5.7
	홍성			1	2.4	8	9.1
	예산			3	7.1	8	9.1
서해안권	소계	2	40.0	2	4.8	13	14.8
	보령	1	20.0	2	4.8	7	8.0
	서천	1	20.0			5	5.7
	태안					1	1.1
금강권	소계			4	9.5	17	19.4
	논산			3	7.1	7	8.0
	금산			1	2.4	5	5.7
	부여					5	5.7

주: 기타 2개소(서산, 계룡)는 제외함

자료: 충청남도

## ○ 전략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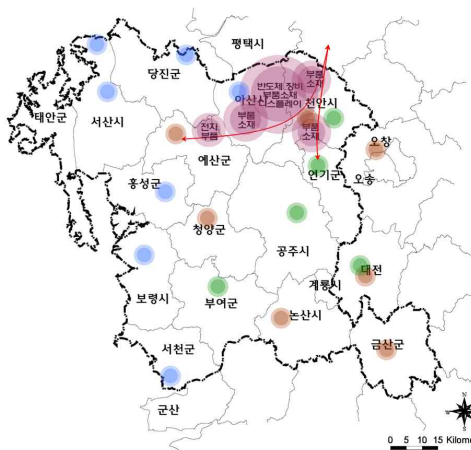
- 충남 4대전략산업 중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cash cow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 구체적으로 '00~'09년 기간 중 충남의 수출액은 연평균 9.8%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주요 수출품목으로 전자·정보기기과 자동차·부품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매우 높다.

**<표 9> 충남 5대 수출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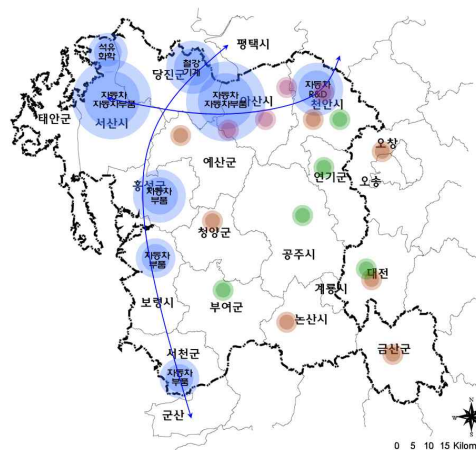
2000				2009			
순위	품목명	금액 (백만\$)	비중(%)	순위	품목명	금액 (백만\$)	비중(%)
총수출		16,991	100.0	총수출		39,428	100.0
1	집적회로반도체	8,818	51.9	1	평판디스플레이	14,478	36.7
2	승용차	1,483	8.7	2	집적회로반도체	10,539	26.7
3	컴퓨터 부품	922	5.8	3	합성수지	1,539	3.9
4	합성수지	670	3.9	4	석유화학중간원료	1,306	3.3
5	경유	621	3.7	5	자동차부품	909	2.3
합계		12,514	73.7	합계		28,771	72.9

자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 이러한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주로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산업입지의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y) 패턴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

[그림 6]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현황과 발전전망

### (3) 기초생활여건 및 생활서비스

- 기초생활여건 및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여건에 있어서 충남 시·군은 모든 지표에 있어서 전국 시·군 평균 수준보다 열위에 있다.
- 그러나 충남의 북부권은 공교육기반, 아동복지기반, 문화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전국 시·군 평균 수준보다 높고, 충남지역 내에서도 가장 양호한 지역에 속하여 지역경제 부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서해안권과 금강권은 기초생활여건 및 생활서비스 여건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보건·복지기반 부문이 열위에 있다.

<표 10> 충남의 권역별 기초생활여건

지표	세부내용	전국 시·군	충남								
			종합	북부권			내륙권			서해 안권	금강권
				소계	동북 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주택 신규확	20년 미만 주택비율	69.69	72.09	79.12	84.17	74.07	71.93	78.53	65.33	64.72	65.69
식수보급현 대화	상수도 보급률	73.31	63.59	71.53	83.15	59.90	60.00	74.51	45.49	60.75	57.72
하수처리현 대화	하수도 보급률	62.41	54.49	62.80	68.99	55.61	59.35	70.20	48.49	39.22	43.45

<표 11> 충남의 권역별 교육여건

지표	세부내용	전국 시·군	충남								
			종합	북부권			내륙권			서해 안권	금강권
				소계	동북 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공교육 기반	1km당 학교 수 (초·중·고)	0.17	0.10	0.11	0.15	0.08	0.09	0.10	0.08	0.09	0.08
사교육 기반	인구 1천명당 사립학원 수	1.98	1.83	2.02	2.28	1.76	1.97	2.34	1.61	1.46	1.51



<표 12> 충남의 권역별 보건·복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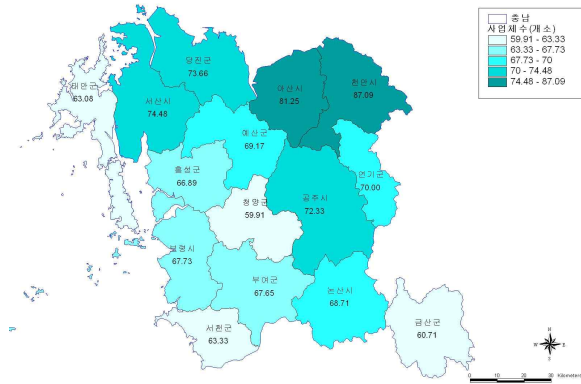
지표	세부내용	전국 시군	충남								
			종합	북부권			내륙권			서해 안권	금강 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의료서비스 질	인구 1천명당 의료인 수	1.15	1.02	1.96	3.15	0.76	0.57	0.60	0.54	0.42	0.62
의료서비스 기반	인구 1천명당 병상 수	1.69	1.39	2.21	3.61	0.81	0.93	1.25	0.61	0.79	1.28
아동복지 기반	아동인구(6세미만) 1천명당 교육시설 수	5.12	4.85	4.23	4.66	3.81	5.11	5.20	5.02	4.58	5.83
노인복지 기반	고령인구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0.007	0.007	0.008	0.014	0.005	0.006	0.007	0.005	0.004	0.006

1)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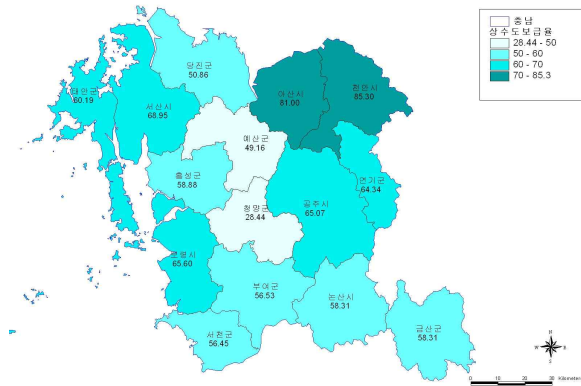
<표 13> 충남의 권역별 문화체육기반

지표	세부내용	전국 시군	충남								
			종합	북부권			내륙권			서해 안권	금강 권
				소계	동북권	서북권	소계	대전권	도청권		
문화시설	인구 1천명당 문화시설수 <sup>1)</sup>	0.07	0.04	0.04	0.03	0.04	0.05	0.05	0.05	0.05	0.04
체육시설	인구 1천명당 체육시설 수	0.50	0.46	0.55	0.62	0.48	0.45	0.53	0.36	0.40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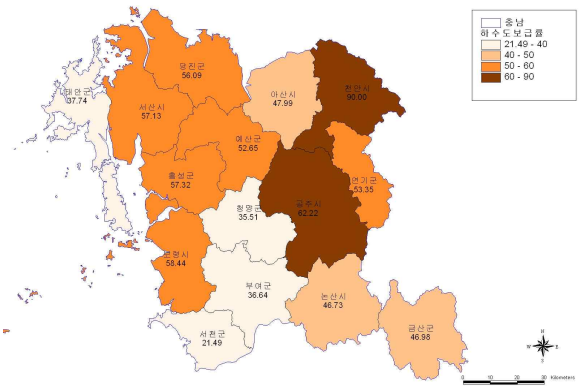
1)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사군민화관 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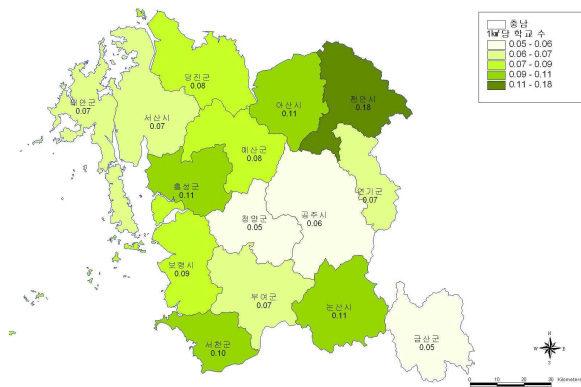
20년 미만 주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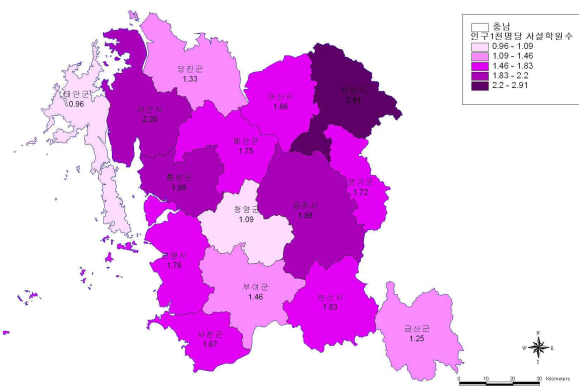
상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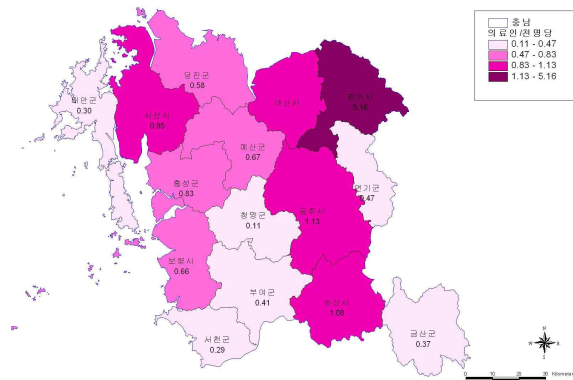
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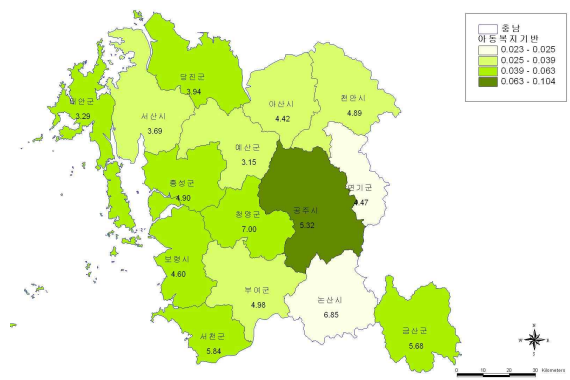
km²당 학교수(초·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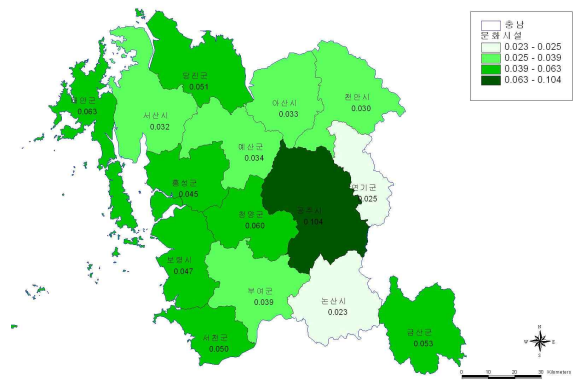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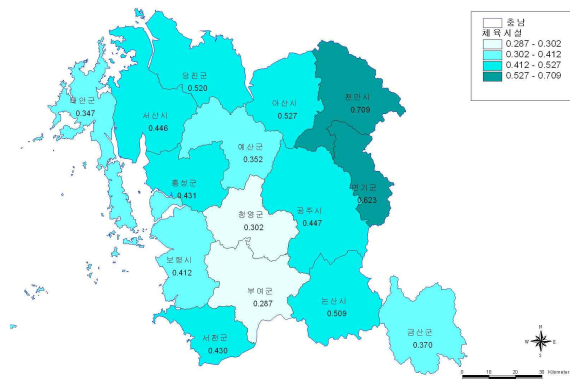
인구 1천명당 의료인 수



이동인구(6세 미만) 1천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1천명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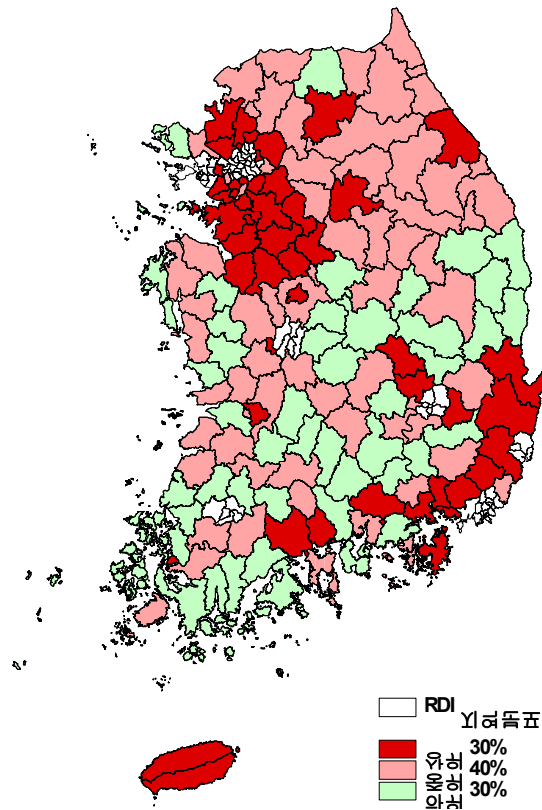


인구 1천명당 체육시설수

#### (4) 종합분석

- 지역발전의 공간분포 특성상 국토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상위 지역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양 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시·군에서는 상대적 낙후가 심화되어 있다.
- 반면, 발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지수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하위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지만, 일부 지역들은 관광활성화 등으로 전반적인 지역발전 수준에서 RDI 중위 지역에 포함되고 있다.
- 충남의 시·군 중에서는 천안·아산·계룡지역이 상위 지역에 속하고, 서천·부여·청양·예산·태안지역이 하위 지역에 속하며, 나머지 시·군은 중위 지역에 속한다.

- 하위지역에 속한 지역(낙후지역)들은 차령산맥이 통과하는 산악지역 및 연안·도서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취업기회가 적으며(제조업 고용기회 및 사업체 고용기회가 취약하고 지방세 징수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함). 노령화에 따라 인력부족이 심하고, 보건·복지 및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다(성경룡 외, 2004, 83-84). 이러한 낙후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생적인 발전역량의 부재와 자립기반의 상실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지역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성경룡 외, 2004, 85).
- 중위지역에 속한 시·군은 수도권·대전대도시권 주변지역이거나 경부축 또는 서해안고속도로 연결지역들이다.



[그림 7] 지역발전진수(RDI) 분포도

### ○ 충남도내 지역간 불균형 심화<sup>2)</sup>

- 충남 북부지역은 수도권 확장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수도권과의 연계는 강하나 수도권 내부와의 연계는 오히려 취약하다.
- 수도권 인접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도권, 대전광역시, 충남 북부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 충남 북부지역의 변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공간적 확장 영향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 수도권 인접 지역의 산업 집중 영향으로 천안, 아산 등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인접지역에 수도권에서 흘러내려오는 첨단기술산업 및 중저위 기술산업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뒷받침해 주는 생산자 서비스산업 및 혁신역량은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가 수출-내수, 중화학공업-경공업, IT산업-비IT산업 등 부문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북부지역은 수출부문의 주력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등과 관련된 업종이 많이 집적되고 있다.
- 수출주도형 IT대기업 중심의 세계화전략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IT산업의 특성상 고용효과가 그리 많지 않으며,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IT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한계가 있다(박경 외 13).

#### 2) 우리나라의 불균형발전 과정(박경·강현수, 10-11)

-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해안 중심으로 지역 편향적 자원을 배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초기 불균형이 나타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저발전지역에서 발전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했음.
- 그 후 발전지역에 편중된 투자가 지속되면서 발전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저발전지역의 잠재력이 상실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
- 이 구조 속에서 국가적 자본투자가 집중되어 산업화·도시화된 발전지역과 투자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발전지역 간에는 경제적 격차 외에도 교육, 문화, 생활환경 상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한편,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발전지역에서도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집중과 그에 따른 과밀로 인한 문제들 즉,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함.

- 천안, 아산 등 북부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급격한 집적과 그에 따른 과밀로 인한 문제들 즉,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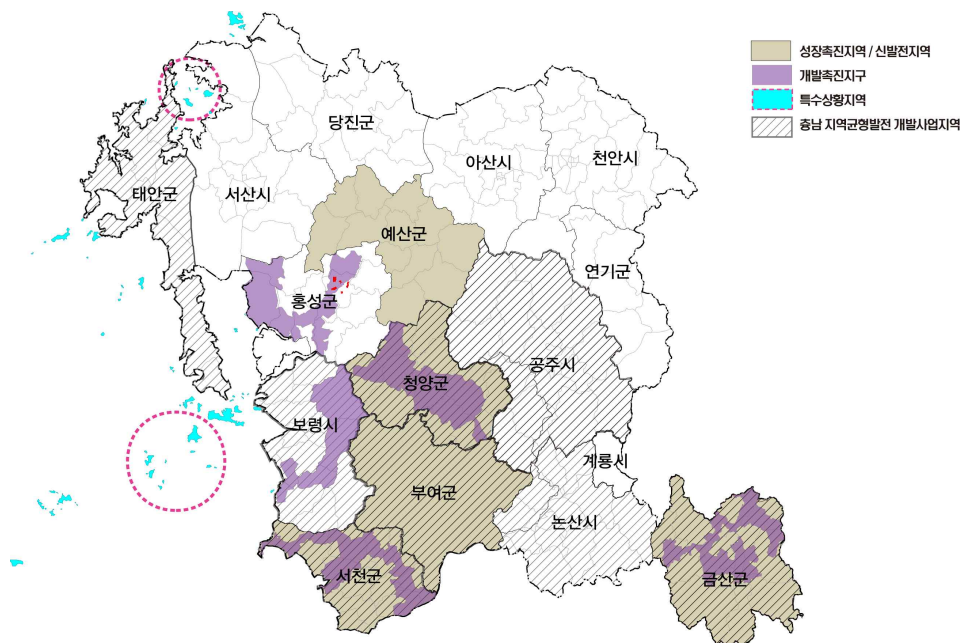
#### ○ 기타지역의 변화와 문제점

- 충남 남부 내륙지역 등의 발전을 통한 충남지역내 균형발전 및 새롭게 입지한 제조업의 현지화, 토착화, 지역내 생산연계망 확충 등이 과제이다.
-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전이 매우 미약한 상태로서, 지역의 고용과 소득원이 부족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
- 이로 인해 인구수의 절대적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내수 서비스산업도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박경·강현수, 92).
- 이처럼 산업낙후지역은 산업기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임. 이러한 산업 낙후지역은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입지적 매력이 약한 관계로 기업의 수요가 없어서 산업단지의 상당분이 미분양되고 있다.
- 특히 근래들어 기업들의 입지 행태가 필요 기술과 인력을 찾아서 특정 산업의 집적지 등에 관한 집중 경향이 높아지고, 값싼 노동력을 찾는 기업은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지역의 입지적 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충남의 균형발전 관련정책 추진실태

### (1) 지역균형발전 관련정책 대상지역 개요

- 개발촉진지구 : 보령, 태안, 서천, 부여, 청양, 홍성, 금산(7개 시·군)
- 성장촉진지역 :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5개 시·군)
- 신발전지역 :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5개 시·군)
- 충청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8개 시·군)
- 특화발전 특구 : 아산, 금산, 논산, 청양, 예산, 서천, 태안(7개 시·군)



[그림 8]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지구

## (2)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정책

### □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정책간 비교

구 분	개발촉진지구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
근거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목 적	현재히 낙후된 지역 또는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종합개발 지원	현재히 낙후된 지역,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위한 종합개발 지원	도서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등
선정지표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충액, 재정력지수, 노령화지수, 사업체총종사자비율, 도로율, 지역접근성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	제주도를 제외한 전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도지표 기준 전국 하위 30% 미만인 지역	성장잠재력을 측정하여 하위 70개 시·군 도출	10인 이상 연중 거주하고 있는 도서 및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서 중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449개)	57지 지표중 37지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
대상지역	시·군내 일정범위, 다수 기초생활권 포괄 가능	기반시설 등 여건이 취약한 시·군 등 기초생활권	인구 10인이상 거주하는 해상전도서(제주도 제외)	군사분계선 남방 2km 지점을 있는 선으로부터 민간통제선 사이의 지역
	보령, 태안, 서천, 청양, 홍성, 금산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보령(14), 서천(1), 홍성(1), 태안(2), 당진(3)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96개 읍·면·동
개발사업 및 지원제도	생활기반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등 재정지원(개발사업비 지원: 낙후지역형)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행정지원(절차간소화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득창출기반 확충, 향토자원 개발 활용, 교육·의료·복지 증진 등 ※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100% 보조율 적용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 중심읍·면 활성화 관련 사업	권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경사업, 기간교통시설 확충, 상수원 개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생태체험관광개발



### (3)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 추진배경

-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산업구조 고도화가 주로 천안·아산등 북부권과 천안~대전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형성,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 이에 충남도에서는 4대 권역별 성장거점 동력을 연계하여, 道內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 추진

####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07. 3. 30)

-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sup>3)</sup>하여, 군특 도 배정액(시도자율계정)의 10%,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의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580억원 규모로 지원<sup>4)</sup>

#### ○ 지원대상 시·군 선정

-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 낙후지역 8개 시·군을 선정('07. 5. 10)
  - 6개 항목 분석지표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평균 미만인 시·군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역인 홍성·예산군(낙후도5, 6위)은 제외
- 지원기준 : 市지역(년 60여억원), 郡지역(년 80여억원)
  - 지원대상 시군은 每 5년마다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선정

#### ○ 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

- 기본계획 : 2020년까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개발계획 : 道균형발전 특별회계로 5년간 안정적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성장동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
- 시행계획 :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위 사업별 집행계획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 확정

#### ○ 사업추진상 애로 및 소요재원 감소

- 국가균특회계 개편('09. 4. 22법개정)과 道보통세 세수 감소에 따른 道균형 발전특별회계 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
- 매년 필요재원 : 국·도비 580억원(광특290, 도비290)

3) 평가지표는 인구증가율,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노령화지수, 시군 재정력 지수, 소득세할 주민총액, 도로율의 6개 항목임

4) 시지역(공주, 보령, 논산) 년 60여억원, 군지역(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년 8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3개시 × 60억원 = 180억원, 5개군 × 80억원 = 400억원
- '10재원확보 : 538억원(광특266, 도비272) ⇒ 부족 42억원

#### (4) 종합평가

- 현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주환경,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균형발전정책이 외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을 지향하고, 지역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내생적 지역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추구했던 신활력지역사업은 2010년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주요 재원인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지역의 자립역량 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저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소프트사업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와 지역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의 지혜와 기획에 의한 테마 선정에 의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취지의 사업이었던 신활력사업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투입한 만큼 금방 그리고 명확히 보이는 인프라 사업에 비해 성과창출이 느릴 수 밖에 없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애로가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이같은 이유들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혹을 받기 쉽다(김현호, 2007, 229).
- 사업의 통합, 연계 추진이 부족하다. 향토자원은 융·복합적인 개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향토자원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특정한 부문의 개발로 한정되지 않고 1차, 2차, 3차 산업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의 속성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앙 차원에서는 주체간 협력적인 사업이 취약하고, 지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미약한 편이다. 아울러 지역내의 인프라 기반적 사업과의 연계적 사업의 추진이나, 유사하거

나 동일한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지역간의 연계적 사업 추진도 미약한 편이다(김현호, 230-231).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토대부문인 중소기업, 토착산업, 1차산업, 상점가 진흥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박경 외, 47-48).
-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다른 편에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토대부문인 중소기업, 토착산업, 1차 산업, 상점가 등이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다.
- 중소기업, 토착산업, 1차산업, 상점가는 지역의 고용창출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상점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리더나 고령자의 생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의 쇠퇴와 함께 지역사회의 쇠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 충남의 지역구조 변화 전망 : 두 가지 시나리오

- 충남은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과밀억제 정책 등에 의해 수도권 산업기능 수용의 최적의 대안지로서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충남의 여타 지역은 아직 농림어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흡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역 내의 불균형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는 공주·연기 주변 지역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충남의 특화산업인 자동차,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관련 기업들의 이전이 가속화되어 자연스럽게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충남은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주5일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서해안지역은 관광산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근교농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고속교통망이 조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도시개발, 산업입지, 유통, 도농 교류 등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 따라서 충남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2가지 발전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 (1) 시나리오 1: 공간적 분화(Spatial Divide)에 따른 지역내 성장 격차 심화

- 시나리오 1은 산업발전의 추세에 따라 특정의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충남도내 공간적 분화에 따라 지역내 성장 격차가 심화되는 부정적 발전 시나리오이다.
- 고속철도의 개통과 광역교통망의 확충, 수도권전철 연장 등으로 인하여 충남 서부-북부축이 수도권지역에 기능적으로 더욱 강하게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 충남 서부-북부축은 IT와 자동차산업 등이 집적한 수도권 남부지역과의 기능적인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 충남지역에 LCD와 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문화산업 등이 집적하는 것은 충남자체의 내부역량보다는 외부요인(예: 수도권 규제, 기업전략, 중국 부상 등)에서 비롯
- 충남 산업이 이러한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충남지역 내 불균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 대전, 천안·아산 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 격차가 심화될 우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주·연기지역에 입지할 예정이어서 행정도시건설 예정지역, 대전지역, 오송, 청주지역 등이 발전지역으로 부상
- 따라서 중심(발전)지역과 주변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은 발전지역으로, 충남 서부-북부 지역은 광역수도권 편입 등으로 충남이 공간적으로 분절될 우려

## (2) 시나리오 2: 충청권의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자율적 경제권역 형성

- 시나리오 2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한 긍정적 발전 시나리오로서 충청권의 네트워크형 공간구조에 기반을 둔 자율적 경제권형 형성이다.
- 전략적인 차원에서 행정도시(안) 예정지를 행정·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충청권이 하나의 자율적 경제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남 북부지역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Edge City(예 : 미국 워싱턴 DC의 주변 배후지역이 IT의 집적지로 각광)로서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충남 남부지역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지역이자 관광·여가, 바이오산업의 집적을 유도
  - 또한 충남, 충북, 대전의 각 도시 및 지역간 기능적 보완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와 산업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광역경제권의 임계규모(critical mass)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 이러한 공간구조를 형성한다면 수도권과 구별되는 자율적인 경제권역이 가능하며,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 충청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
  -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동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세계 대도시와 경쟁·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권 교류·협력의 Hub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Ⅲ. 상생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설정

#### 1. 권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 1) 기존 계획상의 권역 설정

- 충청남도는 1989년부터 권역별 개발전략을 도입하였으며, 계획의 목적과 개발전략, 권역설정 기준, 주변 시·도와의 관계, 교통체계의 발달, 대규모 건설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의 추진 등과 연계하여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표 14> 관련계획의 권역구분 비교

구 분	계획기간	권역수	권역설정 기준	권역별 범위
권역별 개발계획(안)	1989-2011	6	입지특성, 도시권, 지역 간 연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권 : 공주, 부여, 논산</li> <li>• 대전대도시권 : 연기, 금산</li> <li>• 북부권 : 천안, 아산</li> <li>• 서북부해안권 : 서산, 당진, 태안</li> <li>• 서북부내륙권 : 홍성, 예산, 청양</li> <li>• 서남권 : 보령, 서천</li> </ul>
제2차 충청남도 건설 종합계획	1992-2001	6	생활권, 입지특성, 공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고도권 : 공주, 부여</li> <li>• 대전연계권 : 금산, 연기, 논산, 계룡신도시</li> <li>• 북부내륙권 : 천안, 아산</li> <li>• 북부해안권 : 서산, 당진, 태안</li> <li>• 서부내륙권 : 홍성, 예산, 청양</li> <li>• 서남권 : 보령, 서천</li> </ul>
제3차 충청남도 종합 계획	2000-2020	4	생활권, 입지특성, 지역 간 연계성 연계개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권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li> <li>• 서해안권 :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li> <li>• 백제권 :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논산)</li> <li>• 금강권 : 논산 연기,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청양)</li> </ul>
제3차 충청남도 종합 계획 수정계획	2008-2020	4	생활권, 입지특성, 지역 간 연계성 연계개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li> <li>• 서해안권 :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li> <li>• 내륙권 :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li> <li>• 금강권 :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li> </ul>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안), 1989.

충청남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00.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

## 2) 본 연구에서의 권역 설정 기준

### □ 등질성 기준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서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을 동일한 개발권역으로 분류하여 연관사업의 연계 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또는 범위의 경제성을 제고한다.
- 하천유역권 공동이용 및 관리,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광역적 환경보존 및 관리, 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진흥 등과 같은 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이를 통해 권역별 유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전문화 또는 특화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

### □ 결절성 기준

- 사회·경제적 기능에서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공간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동일한 개발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간적 통합성, 전후방 연관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성 등을 제고한다.
- 생활권, 경제권, 산업협력권, 대중교통권, 관광권 등 기능적 연계 보완 지역을 공간단위로 하는 지역협력계획의 효과적 추진
- 공급처리시설, 편익시설, 광역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운행체계 구축 등 광역서비스 공동 공급

### □ 지역협력계획과 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 기준

- 권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한다.
-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간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한다.
- 지역협력계획(regional collaborative planning)을 통하여 ① 지역발전투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단위 사업 추진의 규모의 경제성 확보, ②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③ 지역간 신뢰 구축, ④ 지역간 분쟁해소와 분쟁 조정을 도모

## 2. 기준별 권역의 구분

### 1) 등질지역

#### □ 성장·쇠퇴 특성에 따른 시·군 유형

- 충청권 시·군의 성장·쇠퇴 특성을 나타내는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임준홍 외, 2009, 35-36).
- 제1유형(군집)은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과 대전광역시  
에 인접한 계룡 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군들로서 인구 및 사업체  
종사자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
- 제2유형(군집)은 보령, 논산, 금산, 연기, 홍성, 태안 등 인구변화는 안정적  
이지만 사업체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군이다.
- 제3유형(군집)은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인구와 사업체종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쇠퇴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표 15> 시·군 유형과 특성

구 분	해당도시	군집특성	쇠퇴 주원인
제1군집	천안시, 아산시, 서 산시, 계룡시, 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li> <li>• 지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시·군 청소재지가 쇠퇴</li> <li>•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주환경의 문제가 심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감소</li> <li>• 편의시설 부족</li> <li>• 교육환경 열악</li> <li>• 주변도시 영향</li> <li>• 수도권 영향</li> </ul>
제2군집	보령시, 논산시, 금 산군, 연기군, 홍성 군,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침체하고 있는 지역</li> <li>• 시·군청소재지의 침체·쇠퇴 현상 발생</li> <li>• 정주환경 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감소</li> <li>• 인구유출</li> <li>• 편의시설 부족</li> <li>• 주변도시 영향</li> <li>• 수도권 영향</li> </ul>
제3군집	공주시, 부여군, 서 천군, 청양군, 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li> <li>• 시·군청소재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쇠퇴</li> <li>• 다양한 지역 내부·외부의 쇠퇴 요인 작용(일자리감소와 인구유 출이 가장 큰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감소</li> <li>• 인구유출</li> <li>• 교육환경 열악</li> <li>• 주변도시 영향</li> <li>• 수도권 영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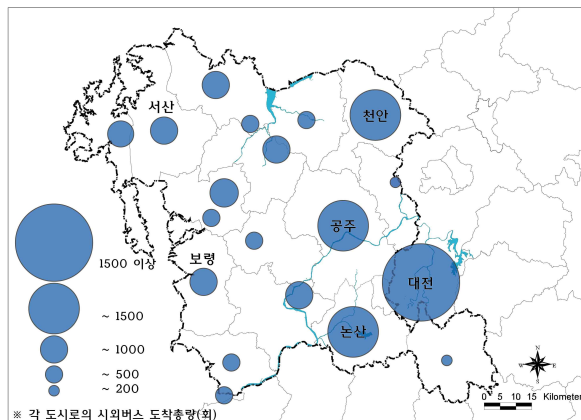
자료: 임준홍 외,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9,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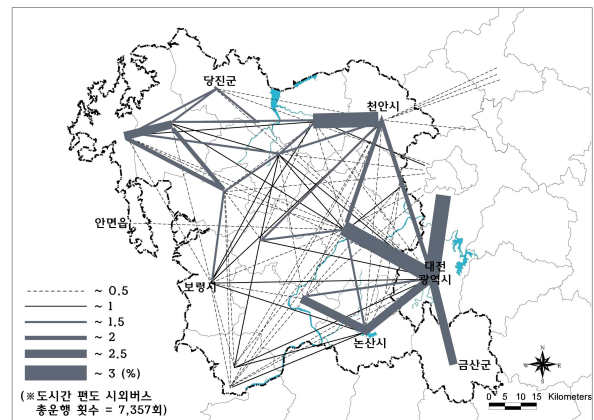
## 2) 기능지역

### □ 버스통행에 의한 지역간 연계

- 총 버스 유입량을 보면 대전, 대전이 최대의 결절점이고, 천안, 공주, 논산 등이 다음 결절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핵심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점들은 여객 유동 결절성이 낮다.
- 시외버스의 지역간 연계권은 대전 중심의 공주, 논산, 금산, 연기 연계권, 천안 중심의 아산, 공주, 대전 연계권, 논산 중심의 공주, 부여 연계권, 서산 중심의 태안, 당진 연계권, 홍성 중심의 서산, 태안 연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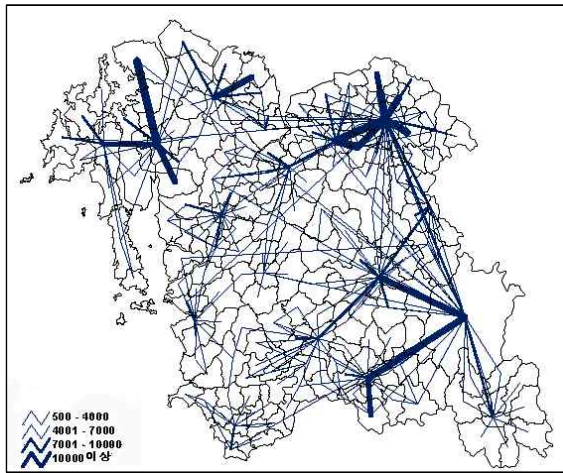
[그림 9] 도시별 시외버스 도착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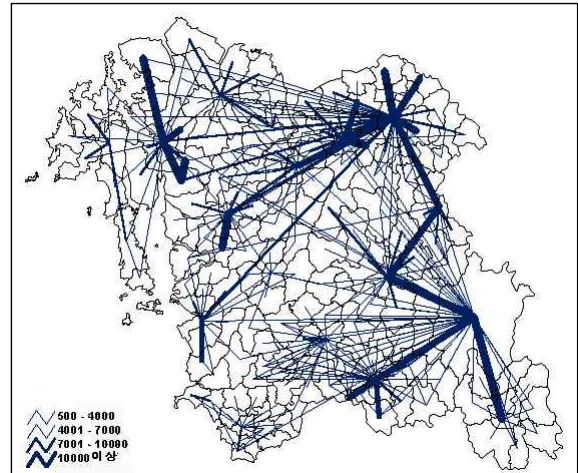
[그림 10] 충남지역 시외버스 유동

### □ 소비생활권 구조

- 일상생활용품 구매권(저차 상품)
  - 대전광역시 중심권(공주, 논산, 연기 금산 등), 천안·아산 연담권, 서산 등이 광역적인 구매권을 형성하는 한편, 각각의 시·군은 시·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적인 구매권을 50-70% 정도 형성하고 있다.
  -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부여, 서천 등은 비교적 독립적인 자체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 병원시설 이용권(고차 서비스)
  - 병원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와 천안시의 영향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반면, 시·군 자체 이용권을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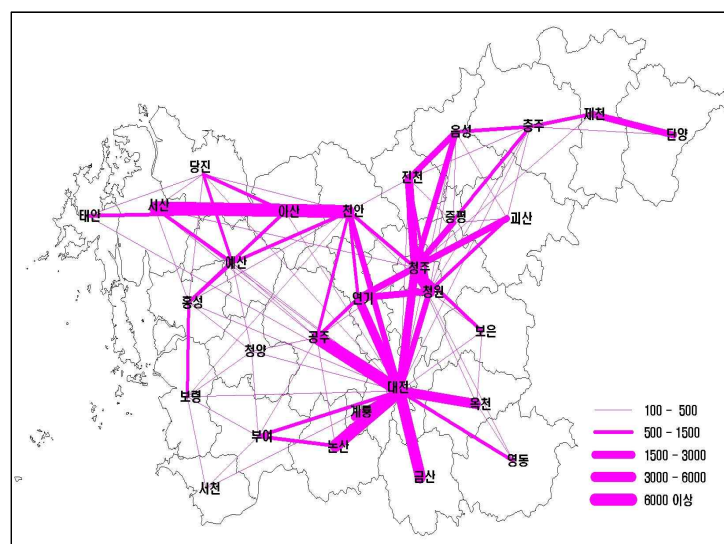
[그림 11] 일상용품 구매권



[그림 12] 병원시설 이용권

#### □ 통근·통학구조

- 통근·통행량의 분포를 기준으로 충청권내 지역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대전을 중심으로 청주와 천안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편, 청주와 천안은 각각 그 주변 지역을 포섭하여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 계획된 고속도로가 전부 완공되면 대전·천안·청주의 영향권은 더욱 확대되어갈 것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이를 중심으로 대전광역도시권, 청주광역도시권, 천안·아산광역도시권간의 상호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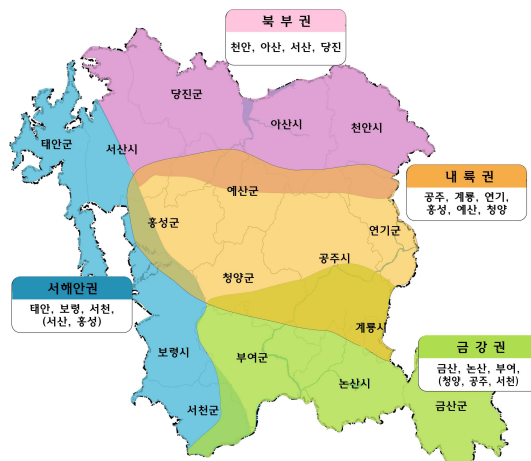
[그림 13]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 3. 권역 설정

- 지리적 여건, 환경·자원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나는 지역유형과 소비생활권, 통근·통학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지역간 연계구조, 그리고 지역간 연계개발에 의한 지역개발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발경영권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에서의 개발경영권 설정 내용과 운영 원칙을 수용하되, 관련 정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구분이 필요한 권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분
  - 권역 내부적으로 지역특성·성장패턴·해결과제 등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부권을 동북소권(천안, 아산)과 서북소권(서산, 당진)으로 세분
  - 권역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거리, 도시생활권의 형성, 광역서비스 관리 등의 면에서 구분이 필요한 내륙권을 동부내륙소권(공주, 계룡, 연기)과 서부내륙소권(홍성, 예산, 청양)으로 세분

<표 16> 4대 개발경영권 설정

권역		대상지역
북부권	동북소권	천안, 아산
	서북소권	서산, 당진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내륙권	동부내륙소권	공주, 계룡, 연기
	서부내륙소권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그림 14]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 IV. 권역별 기능특화 및 균형발전 전략

### 1. 북부권

#### 1) 기능특화 방향

- 충남의 균형적 연계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지역
- 충청광역경제권의 지역경쟁거점, IT 기반산업의 세계적 혁신거점
  - 선도산업(New IT) 및 전략산업(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의 집적지
- 환황해경제권외 교류·교역 및 의 국제비즈니스 중심지

#### 2) 발전전략

- 국내외적 교류·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철도망·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 내륙지역(천안, 아산)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서산, 당진)은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하여 환황해권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국제적 성장지역으로 성장 유도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
  -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정보, 금융,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등) 육성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되, 수도권(IT, 반도체) 및 전북(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과의 초광역 융복합형 산업벨트를 형성
- 천안·아산 간 연담화된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추진
  - 도시간 및 도시와 산업단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순환형 연계교통체계 구축
  - 집약적·자원절약적 토지이용 관리

- 광역도시 기능의 상호 이용체계 구축
- 기존 도심의 재생
- 난개발 제어를 위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 도입·적용
- 거점항만 및 항공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육성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결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물류 유통단지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2. 서해안권

### 1) 기능특화 방향

-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계하는 황해 국제관광·융복합 메가경제권
- 국가기간산업의 녹색성장 중심지대
- 해양바이오산업, 선진 수산업, 해양자원 활용 선도지역

### 2) 발전전략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국제적 관광지 수준의 종합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서해안 관광·레저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
-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및 관련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생산기능 강화
- 내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안 자연환경, 경관 및 생태계를 활용하여 고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 세계적인 갯벌자원의 보전과 해양·연안지역의 오염·재해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사계절형·전천후형 국제적인 관광·휴양·여가 인프라 구축
- 생태환경 및 농수축산업의 고도화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거점바이오벨리 조성
  - 관련 연구소 유치, 관련 기업 육성, 행정지원체계 구축

### 3. 내륙권

#### 1) 기능특화 방향

- 도청신도시 중심의 연합도시권 형성 및 공동발전
- 국가 중추행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복합벨트
- 농업 및 농촌경제의 혁신·다각화 선도지역

#### 2) 발전전략

- 충남의 중서부지역에 다기능 신도청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충남도내 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신도청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긴밀히 연계하면서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을 구축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 구축
- 농축산바이오산업 관련 산업 육성
  - 농업바이오(충남 농업TP, 예산)
  - 동물(축산)바이오(홍성, 청양)

### 4. 금강권

#### 1) 기능특화 방향

- 금강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 지역
- 대적R&D특구 연계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Rurbanization)

## 2) 발전전략

-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연계·협력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개발수요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금강권역을 특성화·브랜드화
  -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의 발굴·육성 및 테마형 광역관광벨트 구축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 육성, 대덕R&D특구와 연계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 국방산업 클러스터, 인삼약초바이오, 충남동물자원센터 등 활성화
- 대도시 근교·관광농업 육성,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 V.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 1. 광역·연합도시권 형성과 협력적 도시·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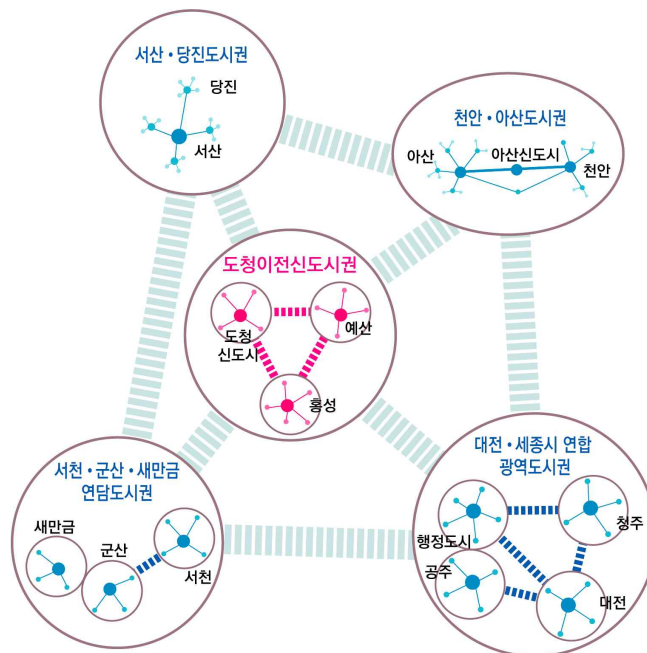
#### 1) 소도시연합 광역도시권 형성과 기존 광역도시권의 체계적 성장관리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서 충남도내의 기존의 ①대전광역시 중심의 광역도시권과 ②천안·아산 연담도시권내 도시·지역간 연계와 성장관리를 강화하고, ③도청이전신도시 중심의 소도시연합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여 각각의 광역도시권내 도시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④서산-당진-태안 간 연합도시권을 형성한 다음, 도청이전신도시 중심의 소도시연합형 광역도시권과 연계하고, ⑤서천은 군산-새만금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부여·보령과도 연계관계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광역도시권별로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광역도시권간 연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충남지역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 천안·아산 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광역시·청주시·공주시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광역도시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수도권 효과 등에 따라 빠른 성장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아산 광역도시권은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의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에 효과적으로 파급되도록 상호 연계를 촉진한다.
- 광역도시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나아가서 스마트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적 토지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공원 등 광역시설의 상호이용 방식을 도입토록 한다.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따라 고차의 행정·업무, 문화·예술, 교육·의료 서비스 등의 기능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진-대전 고속도로가 충남의 동남부지역



과 서북부지역간을 1시간 내외로 연결하게 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다중적인 연계구조를 형성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교육주거기능을 활성화하여 최근 입지한 제조업의 현지화, 토착화, 지역내 생산연계망의 확충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도청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들 거점지역<sup>5)</sup>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통망체계와 함께 통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점간 공동이용, 종합이용, 상호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광역시설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5] 대전·충남지역 광역·연합도시권의 구성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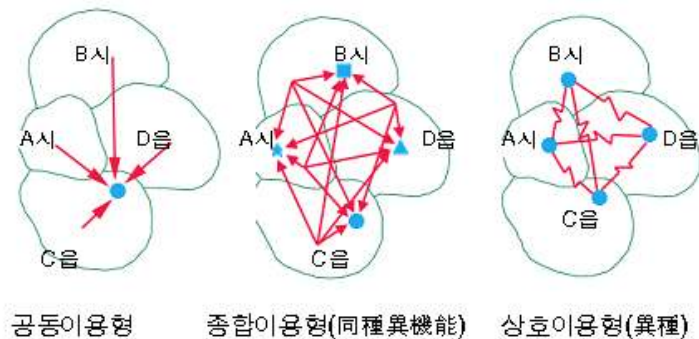
## 2) 광역적 도시기능 공동이용 방식의 도입·운영

-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인접 시·군간의 시간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생활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원의 복합 연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시설, 상수공급시설, 공설운동장 등의 광역시설을 시·군마다 각각 설치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특히,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투자를 하지 않고도 운영방식을 소프트화 함으로써 광역적 효율화를

5) 도시와 각종 집적지 즉, 산업집적지(단지), 물류·유통단지, 항만 등을 포함한다.

기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금성근 역, 1997, pp.151-156).

- ‘광역적 도시기능의 공동이용 방식’은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① 공동이용, ② 상호이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이용형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을 복수의 도시가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형태이며, 상호이용형은 ①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같이 동일한 종류이면서 다른 기능을 지닌 도시시설을 네트워크화 하고, 개개의 시설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종합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형과 ② 다른 종류의 도시시설을 관련 자치단체가 각각 정비하여 서로 이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이와 같이 ‘광역적 도시기능의 상호이용 방식’을 도입할 경우 ①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과, ② 활발한 역내의 교류, ③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시에 다목적홀(문화), B시에 종합병원(의료) C읍에 운동공원(스포츠) D면에 연수시설(교육)을 배치하고, 이것들을 하나의 예약시스템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네 개의 소도시가 일정 규모의 도시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그림 16] 광역적 기능의 공동이용 유형

### 3) 새로운 지역활성화거점 조성

- 고속도로 IC 연접부 또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은 자원집적지, 도시·산업적 토지 이용 적지 등을 복합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형 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대도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주변 농어촌 및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은 지역활성화거점으로는 ① 복합단지형, ② 산업단지형, ③ 관광단지형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복합단지형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수도권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Outlet, Shopping Park, 물류·유통단지 등이 복합된 특화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형은 제조업 및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관광단지형은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전광역시권 및 수도권의 전원주택 수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지역활성화거점 구성에 있어서 고속도로 IC 연결부가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는 고속도로 개통 후 가장 변화가 심한 곳 중의 하나가 고속도로 IC 연결부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IC 연결부는 원자재나 제품수송이 유리하여 기초자재형보다는 가공조립형의 제조업체들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입지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IC 연결부의 난개발 및 토지투기에 의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감시 및 적절한 토지이용 규제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IC 연결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적정기능·시설을 도입하며,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IC 연결부는 접속도로망의 정비와 연계하여 개발하되, 첨단산업·정보관련시설·연구개발시설·물류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4) 신성장거점도시(신도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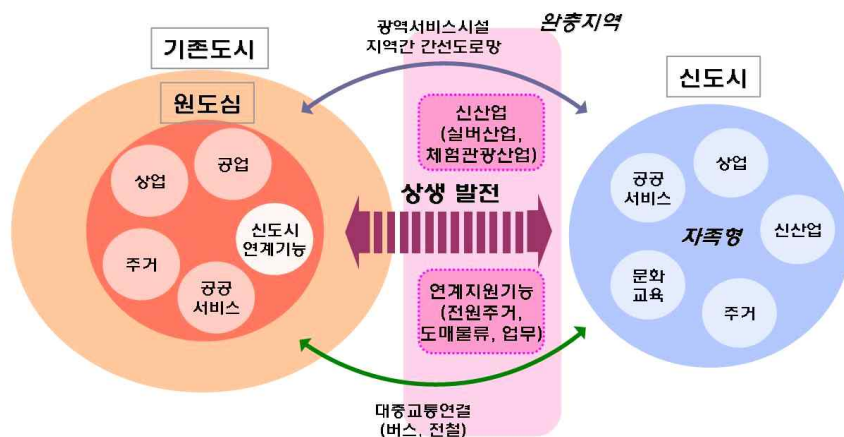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신성장거점도시들은 상업, 서비스업, 행정·업무, 문화·예술, 체육·복지 등 최첨단의 기능을 보유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주거공간, 공원·녹지 등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성장거점도시들과 그 주변의 소도시들<sup>6)</sup>인 공주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의 중심지 간에는 큰 폭의 질적인 격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소도시의 배후지의 상품·서비스 이용인구<sup>7)</sup>와 거주인구를 신성장거점도시로 빼앗기면서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심할 경우에는 도시 전반의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따라서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소도시의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6) 인구 20만 이하의 시급도시와 소도읍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7) 소도시 거주인구와 배후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포함한다.

신성장거점도시와 상호 보완·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소도시는 먼저, 재래시장과 상가환경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시가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읍급도시들은 기존의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급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 나아가서 신성장거점도시와 인근 기존 소도시간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상생 발전에 요구되는 조화된 도심경제 활성화와 관광, 문화, 교육, 교통 분야 등이 안배된 신성장거점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기존도시 및 기존도심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정책 발굴이 필요하고, 도시·지역간 연계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의 구축과 광역교통망 정비가 필요하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구별 특화 문화시설·공간 공급체계 구축과 체육레저시설·문화시설 등의 정비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도시 경쟁력 및 탐방객을 위한 공공디자인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송두범 외, 2008. 10, P.24-26).
-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에는 지역간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완충지역에는 연계지원기능(전원주거, 도매물류, 업무) 및 신산업(실버산업, 체험관광산업)을 도입하여 기존도시와 신도시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에는 기존도시의 산업과 차별화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고 도심의 기존 사업지원 관련 산업을 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허브-스포크형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한다(송두범 외, 2008. 11, P.27).



[그림 17] 신성장거점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상생발전 구조

## 2.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IT 산업 중심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충남 북서부지역(당진, 서산, 아산)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중심의 융·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산업발전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전후방연관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소재 산업, 첨단 기계부품 및 장비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아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 R&D 센터 설립, 당진의 석유화학·철강에 기반한 첨단 신소재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서산·홍성·보령을 연계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Cluster 구축, 군산·장항의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특성화하여 상호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R&BD에 대한 지원, 대중국 전기자동차 시장개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IT 기반의 융복합 산업으로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특화분야는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환황해 경제권의 글로벌 허브를 담당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내륙지역의 대전-천안-청주의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과 더불어 충청권의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2)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IT 산업 중심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 충남 남서부 지역(서천, 보령, 홍성)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의 융합발전을 지향하면서 친환경 생태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기계 및 자동차 부품, 농축산 바이오, 식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향후 새만금지역이 대형과학연구시설 유치 등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소재 및 부품 양산 기지, 태안에너지종합특구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특성화하여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에는 에너지 자립형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 육성을 통해 공동발전을 꾀해야 한다.
- 이러한 특화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 황해 경제자유구역과 등 주요 산업거점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농축산 바이오, 식품산업을 통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 3) 충남 서부지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강화

- 충남 서부지역의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국가혁신체계(NIS)의 거점에 해당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지역은 NBIG(NT, BT, IT, GT) 첨단 신기술 분야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하고, 개발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기능으로 계획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충남 서부 지역의 특성화 산업은 가치사슬상에서 응용연구 → 생산(제품화) → 마케팅 (지식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그리고 R&BD 사업화를 통한 신기술 기반 기업의 창업, 고급 과학기술 인력 확충 및 교육 등의 핵심기능을 가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우선, 충남 서부지역과 대전의 연구개발 거점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상호 신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공식 · 비공식 네트워크 프로그램(만남의 장, 포럼, 스터디 그룹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 개발된 R&D 결과물을 사업화를 중심으로 상호 공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위 'R&BD 사업화 센터'와 같은 공동 연구시설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브로커링(brokering)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브로커링 프로그램은 전문 코디네이터에 의한 협력 파트너(수요자 ↔ 공급자, 수요자 ↔ 수요자, 공급자 ↔ 공급자) 탐색을 지원하는 연계협력 사업지원 단일창구와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3. 관광산업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 강화

#### 1)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

- 최근 개통된 당진-대전 고속도로는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의 중심지와 당진·예산 등 내포문화자원의 집중 분포지를 연결하고 있어 이종·동종 문화자산의 융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서천-공주 고속도로는 공주, 부여 등의 백제문화고도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연결하면서 금강과 병렬적으로 지역을 통과하여 새로운 해양·생태 산업·문화·관광 거점인 서천·군산·새만금 연담도시권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거점관광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땅길과 물길이 만나는 다양한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차령산맥 일대는 독특한 산림생태자원, 경관자원, 전통적인 농촌의 문화자원과 민속, 정취 등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만큼 이 지역농촌지역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당진-대전 및 서천-공주 고속도로의 주변지역들이 동종 또는 이종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하여 협력적으로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충청권관광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충청광역경제권 전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다지역 관광협력체계는 광역적 범위의 통합적 지역관광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관광 홍보 및 개발활동이 그 대상이 되며,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인접 혹은 원격 자치단체와 협력 관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공동으로 사업화하여 추진하는 경우이다.

- 성공적 관광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계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기반, 교통인프라 기반, 인적 기반 등과 같은 공동기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 인프라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다지역 관광협력체계의 협력대상과 범위 설정

- 다지역 관광네트워크의 범위는 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간 관광협력과 연계에 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대상은 사업의 유형 및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사업과 연계사업을 모두 협력대상으로 볼 수 있다(전효재 외, p.21).
  - 직접사업 협력대상은 관광안내 정비 및 공동제작, 순회 버스관광, 관광지도 및 홍보비디오 제작, 휴대용 관광지도 공동판매, 지역패스포트 발행, 팸플렛 작성, 공동 관광홍보 실시, 관광루트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 연계사업 협력대상은 지역 캠페인 및 연수회 개최, 관광홍보단 공동 파견 및 선진관광지 시찰 실시, 관광 강연회 의견교환 실시, 광역관광 소개 공동 홈페이지 개성 등을 들 수 있다.
- 기존의 다지역 관광협력 추진사례를 통해서 관광 네트워크의 협력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면,
  - 먼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협력추진조직으로서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139조, 160조 등), 주요 사업내용은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 관광순환로 조성,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등 10개 사업을 공동 협력(www.jtda.kr)하여 추진하고 있다.
  - 둘째, 일본 도호쿠지방의 관광추진협의회 구성으로서, 도호쿠 6개 현과 JR히가니시온은 도호쿠 지방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도호쿠지방 관광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사업내용은 조직적 관광 홍보의 추진, 광역관광루트의 조사 및 개발, 관광시설의 정비,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 방영 및 가이드맵 작성·배부 등의 공동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다지역 관광협력 추진사례에서는 관광자원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유형



의 자원을 연계하여 코스나 루트를 통한 다지역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구성의 세분화, 다양화, 공동 고객 관리, 마케팅 등 질적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3) 지역관광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과 공동 홍보·마케팅

- 먼저,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관광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상품 구입 및 관광지의 개별방문은 관광객이 가진 정보와 관광지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관광정보에는 관광지의 매력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교통·숙박·음식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전파,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예약과 안내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용웅 외, 2000, pp.314-315).
- 특히, 거점적인 문화관광지부터 U-관광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확대하도록 한다. 관광객들이 관광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관광 안내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U-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PDA, 핸드폰 등 개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관광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인배 외, p.470).
- 둘째로, 지역통합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안내시스템은 관광브로슈어, 비디오, 관광안내판 제작 등 관광정보의 생산에서 부터이며, 관광안내정보의 공급 및 전파의 역할까지 다원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관광안내의 공간적인 범위가 광역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충청권의 통합관광안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셋째, 자치단체 및 관광업계의 협력적 안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안내서비스가 관광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통, 숙박, 음식 및 관광프로그램의 참여를 가능토록 조력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내 관광안내업체, 숙박, 음식, 관광시설, 관광상품 제조 및 판매업체간의 협동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 넷째, 관광안내시설의 종합적 정비·확충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이 지닌 독특한 경관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의 상품화와 가치증대를 위하여 현지 관광안내정보를 개선·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한다. 현지 국·영문 관광안내판의 정비와 확대, 이동 관광안내체계 도입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도록 한다.

#### 4. 현행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발굴·추진

- 정부에서는 둘 이상의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관광개발,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사업과 농산어촌산업의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강화, 환경·복지 등 비선택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 등이 있다.

<표 17> 2010년 선정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예시)

부문	사업명	관련 지자체	사업내용
문화관광	생태관광 금강연계 사업	부여군 등 6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추진 : 팸투어 및 금강권 문화제, 관광홍보물·홈페이지 공동 운영</li> <li>•신규 : 금강권 대표상품 개발(관광상품, 역사문화 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 홍보마케팅 확대</li> </ul>
	내포문화 숲길 조성	서산시 등 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테마의 길 조성</li> <li>•등산로·연결도로 정비, 대피소, 전망대, 쉼터, 포지판 등 조성</li> </ul>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영월군 등 6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간 패키지 관광상품화, 공동 홍보·마케팅</li> <li>※ 일부 사업 자체 추진 등</li> </ul>
	지리산권 자전거 둘레길 조성	남원시 등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전거 둘레길 159km 조성(기조성 37km, 신규 조성 84km), 자전거 커미널, 휴게시설(7개소) 설치</li> </ul>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영월군 등 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질자원, 박물관 등 연계 지질관광코스 개발</li> <li>•공동마케팅(공동가이드북,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인증제</li> </ul>
	영산강 History tour	목포시 등 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니루터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황포돛배 건조, 폭포 설치</li> <li>•공동 홍보책자 제작</li> </ul>
생태환경	지리산 Eco-village 조성사업	남원시 등 7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공원 조성, 옛마을 풍경 복원, 소득 연계사업(지역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문화시설 조성</li> </ul>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 사업	영 주 시, 봉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추진 백두대간 산림 테라피 단지 및 수목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림과학연구단지, 산림과학대학 연합 캠퍼스 조성</li> </ul>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	영월군 등 5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부내륙산악권 테마 숲 조성을 통한 관광메가시티 조성</li> </ul>
특화산업	북분자 광역클러스터 조성사업	고창군 등 3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기능성 제품개발, 육종체계 및 재배기술), 마케팅 및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li> </ul>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전주시 등 3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지 문화마을 조성, 한지장인학교 운영,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li> </ul>
	사과 공동가공제품화 및 농 기업 창업 보육	봉화군 등 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가공제품화센터 건립, 공동 R&amp;D 운영 및 공동창업 마케팅</li> <li>•명품사과 공동 가공 및 R&amp;D 지원으로 농기업 30개 육성</li> </ul>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선군 등 3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소재인 대마(헴프)를 활용한 제조업, 관광산업 육성</li> <li>•헴프 연계 관광산업 육성, 종자 생산, 헴프 1차 가공 및 소재 활용 제품생산</li> </ul>
기피시설	광역 화장시설 건립	강진군 등 4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남 서남부지역 광역 화장장 조성으로 주민편의 증진</li> </ul>

## VI. 권역별 발전촉진을 위한 핵심사업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 □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수립 기초자료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북부권	동북소권	천안,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육성사업(천안, 아산)</li> <li>▪ 문화산업 특화산업 융합형 미니클러스터(천안, 아산)</li> <li>▪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천안권역, 아산권역, (당진권역))</li> <li>▪ 제2경부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천안, 연기)</li> <li>▪ 제2서해안고속도로(아산, (당진, 예산, 홍성))</li> <li>▪ 당진 ~ 천안간 고속도로(천안, 아산, (당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항해권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조성(아산)</li> <li>▪ 자동차-IT 융합산업 진흥사업(아산, (서산, 서천, 홍성))</li> <li>▪ 온천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아산)</li> <li>▪ 서해안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아산, (홍성, 예산))</li> </ul>	
	서북소권	서산,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서산, 당진, (태안, 예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IT 융합산업 진흥사업(서산, (아산, 서천, 홍성))</li> </ul>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카 산업 접적특화단지 조성사업(서산, 당진)</li> <li>▪ 녹색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서산)</li> <li>▪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당진권역, (천안권역, 아산권역))</li> <li>▪ 당진항 육성사업(당진)</li> <li>▪ 제2서해안고속도로(당진, (아산, 당진, 예산, 홍성))</li> <li>▪ 대산~당진간고속도로(서산, 당진)</li> <li>▪ 당진~천안간고속도로(당진, (천안, 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서산)</li> <li>▪ 농수축산 바이오R&amp;D 클러스터 조성사업(서산, (보령, 홍성, 태안))</li> <li>▪ 화훼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서산, 당진, (태안))</li> <li>▪ 철강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당진)</li> <li>▪ 대산 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서산)</li> <li>▪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사업(서산)</li> <li>▪ 서산 웰빙특구 조성사업(서산)</li> <li>▪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대 지정개발사업(당진)</li> <li>▪ 당진~태안간고속도로(당진, (태안))</li> <li>▪ 대산~당진간고속도로(서산, 당진)</li> </ul>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서 해 안 권		태안, 보령,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녹색생태하천 복원사업<sup>8)</sup>(서천, (금산, 부여, 공주, 연기))</li><li>▪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육성 (보령 김, (청양, 논산, 금산))</li><li>▪ 권역별 특화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사업(서천, (청양, 금산))</li><li>▪ 원예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 (태안, (서산, 당진, 예산))</li><li>▪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사업 (서천,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li><li>▪ 지역균형발전사업(태안, 서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청양))</li><li>▪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태안, (도청신도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태안 에너지종합특구 조성 사업(태안)</li><li>▪ 태안 농어촌 녹색신성장지 역 육성사업(태안)</li><li>▪ 서천 에너지 자립 농어촌 정주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서천)</li><li>▪ 자동차-IT 융합산업 진흥사 업(서천, (서산, 아산, 홍성))</li><li>▪ 태안 항공레저 및 R&amp;D단지 조성사업(태안)</li><li>▪ 농수축산 바이오R&amp;D 클러 스타 조성사업(태안, 보령, (서산, 홍성))</li><li>▪ 화훼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 (태안, (서산, 당진))</li><li>▪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태 안)</li><li>▪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 성사업(태안)</li><li>▪ 신두리 사구 자원화사업(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화양농공단지 조성사업(서천 발전촉진지구)</li><li>▪ 비인 선도리 관광지 조성사 업(서천 발전촉진지구)</li><li>▪ 김가공농공단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종천2농공단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한산모시 미니산업단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금강하구둑관광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송림연안생태관광지(서천 투 자촉진지구)</li><li>▪ 춘장대해수욕장관광지(서천 투자촉진지구)</li><li>▪ 홍원항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서천 투자촉진지구)</li></ul>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안) ▪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태안) ▪ 원산도 Seven Islands 조성사업(보령) ▪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조성사업(보령) ▪ 지역간 관광연계 추진(홍원항, 안홍항)사업(서천, 태안) ▪ 장항제련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서천) ▪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 생태지구 조성사업(서천) ▪ 당진 ~ 태안간고속도로(태안, 당진)) ▪ 일반국도77호선 확충사업(태안, 보령, 서천) ▪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사업(보령, (연기, 공주, 청양)) ▪ 보령신항 건설사업(보령)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내 륙 권	동부내륙 소권	공주, 계룡,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원안 추진</li> <li>▪ 지역균형발전사업(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li> <li>▪ 문화산업 공주·부여권 테마 융합형 미니클러스터(공주, (부여))</li> <li>▪ 녹색생태하천 복원사업(공주, 연기, (금산, 부여, 서천))</li> <li>▪ 제2경부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연기, (천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육성(청양 구기자, (보령, 논산, 금산))</li> <li>▪ 권역별 특화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사업(청양, (금산, 서천))</li> <li>▪ 원예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예산, (태안, 서산, 당진))</li> <li>▪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IT 융합산업 진흥사업(홍성, (서천, 서산, 아산))</li> <li>▪ 농수축산 바이오R&amp;D 클러스터 조성사업(홍성, (보령, 서산, 태안))</li> <li>▪ 지역간 관광연계 추진(남당관광지)사업(홍성)</li> <li>▪ 서해안선 복선전철 건설사업(홍성, 예산, (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청양 발전촉진지구)</li> <li>▪ 운곡2농공단지(청양 투자촉진지구)</li> <li>▪ 스틸테크노산업단지(청양 투자촉진지구)</li> <li>▪ 구기자타운(청양 투자촉진지구)</li> <li>▪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청양</li> </ul>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청양, 예산, 홍성, (서천, 금산, 부여)) ▪ 전략산업(자동차부품 소재산업) 육성사업(예산) ▪ 지역균형발전사업(청양,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태안)) ▪ 문화산업 도청신도시권 창의융합형 미니클러스터(홍성, 예산)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청신도시, (태안)) ▪ 도청이전 신도시 지속 추진사업(홍성, 예산) ▪ 제2서해안고속도로(홍성, 예산, (아산, 당진))		투자촉진지구) ▪ (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예산 발전촉진지구) ▪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예산 발전촉진지구) ▪ 신양여래미C.C 조성사업(예산 발전촉진지구) ▪ 증곡전문농공단지(예산 투자촉진지구) ▪ 예당일반산업단지(예산 투자촉진지구) ▪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예산 투자촉진지구) ▪ 예산테크노밸리(예산 투자촉진지구) ▪ 예산일반산업단지(예산 투자촉진지구) ▪ 동물용의약품R&D클러스터 구축사업(예산 투자촉진지구) ▪ 덕산온천관광지(예산 투자촉진지구)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진지구) ▪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단지 (예산 투자촉진지구)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생태하천 복원사업(금산, 부여, (서천, 공주, 연기))</li> <li>▪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육성(논산 딸기·강경젓갈, 금산 인삼, (보령, 청양))</li> <li>▪ 권역별 특화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사업(금산, (청양, 서천))</li> <li>▪ 친고령화사업(부여 고령친화 노인복합단지)</li> <li>▪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사업(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li> <li>▪ 국방산업 육성사업(논산)</li> <li>▪ 지역균형발전사업(금산, 논산, 부여)</li> <li>▪ 지역균형발전사업(금산, 논산, 부여, (공주, 보령, 서천, 청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금산 발전촉진지구)</li> <li>▪ 인삼·약초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금산 발전촉진지구)</li> <li>▪ 치유의 숲 조성사업(금산 발전촉진지구)</li> <li>▪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금산 투자촉진지구)</li> <li>▪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금산 투자촉진지구)</li> <li>▪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여 발전촉진지구)</li> <li>▪ 백제호 관광지 조성사업(부여 발전촉진지구)</li> <li>▪ 은산 제2지구 농공단지(부여 투자촉진지구)</li> </ul>

권역	대상지역	민선5기 시책사업	관련계획 반영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태안)) ▪ 인삼산업 육성사업(금산) ▪ 문화산업 공주·부여권 테마 융합형 미니클러스터(부여, (공주))		▪ 은산섬유농공단지(부여 투자 촉진지구) ▪ 양송이지역특화발전복합단 지(부여 투자촉진지구) ▪ 고령친화노인복합단지(부여 투자촉진지구) ▪ 서동요역사관광지(부여 투자 촉진지구) ▪ 백제문화단지(부여 투자촉진 지구)

8) 금강살리기사업(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 151km 구간) 재검토사업